

- 주요 뉴스: 연준 파월 의장, 신속한 금리인하 불필요, 향후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
 -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감소
 - 미국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재지정.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반영
 - 유로존 9월 산업생산, 전월비 감소.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파월 의장의 일부 매파적 발언, 10월 생산자물가 결과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ECB 금리인하 전망, 기술주 강세 등으로 1.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트레이드 등으로 상승세 지속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차익 실현 등으로 하락, 파월 의장 발언에 2년물 금리는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5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04.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05.8원, 0.24% 상승). 한국 CDS 약보합

		11/14일	11/13일	전일대비			11/14일	11/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49.2	5,985.4	-0.60%	국채 금리 10y	미국	4.44%	4.45%	-2bp
	유럽	507.03	501.59	+1.08%		독일	2.34%	2.39%	-5bp
	중국	3,379.8	3,439.3	-1.73%		영국	4.48%	4.52%	-4bp
	일본	38,536	38,722	-0.48%	CDS 5y	한국	34bp	34bp	-0bp
	한국	2,418.9	2,417.1	+0.07%		중국	63bp	63bp	+0bp
환율	달러지수	106.87	106.48	+0.36%	위험 지표	EMBI+	-	361	-
	유로화	1.0530	1.0564	-0.32%		VIX	14.31	14.02	+2.07%
	엔화	156.27	155.46	-0.52%		WTI유	68.70	68.43	+0.39%
	위안화	7.2271	7.2340	+0.10%	원자재	구리	407.9	408.3	-0.10%
	원화	1,402.5	1,397.5	-0.36%		금	2,564.9	2,573.0	-0.3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파월 의장, 신속한 금리인하 불필요. 향후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

- 파월 의장은 양호한 경제 성장, 견조한 노동시장, 목표(2%)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연율) 등을 감안할 경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 아울러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첨언. 향후 금리경로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경제는 신중한 결정을 감내할 만큼 강하다고 설명
- 또한 인플레이션(연율)은 장기 목표(2%)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은 결국 가능하지만, 때로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 12월 금리인하 가능성 관련 언급은 자제하면서, 향후 금리 경로는 경제 전망 및 지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12월 FOMC에서 기존 예상대로 금리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금리인하 폭과 시기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JPMorgan Chase). 이번 발언 이후 CME의 FedWatch Tool이 제시한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하향 조정(82.3%→58.7%)
- 한편 연준의 쿨글러 이사는 통화당국이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하며, 만일 인플레이션 완화가 정체될 위험이 증가하면 금리인하를 멈추어야 한다고 발언.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이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감소

-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은 0.2%, 2.4%로 전월치(각각 0.1%, 1.9%) 대비 높은 수준. 예상치(0.2%, 2.3%) 대비로는 각각 부합 및 상회. 근원 PPI도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이 0.3%, 3.1%로 모두 전월치(각각 0.2%, 2.9%) 대비 높았고, 예상치(각각 0.3%, 3.0%) 대비로는 보합 및 상회
-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 한편 11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1.7만건으로 전주(22.1만건) 대비 소폭 감소. 이는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으나, 매우 강력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 아울러 10월 신규 취업자 수의 급감은 일시적 현상임을 시사

■ 미국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재지정.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반영

-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 한국의 경우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및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 흑자라는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 이전에는 양자 간 무역흑자 기준만 충족

■ ECB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금리인하는 선제적 조치였으나 일부 이견도 존재

-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하는 인플레이션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성격의 선제적 조치.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완화 및 경제 성장 둔화 신호들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
- 이날 권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연율)이 예상과 같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경제 회복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다만 통화정책은 먼저 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발언

■ 유로존 9월 산업생산, 전월비 감소.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 9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2.0% 줄었고, 이는 예상치(-1.4%) 대비로도 저조한 결과. 특히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산업생산이 2.7%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평가
- 한편 독일 경제자문위원회는 금년에도 자국의 GDP가 역성장(-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고, 내년 GDP 증가율 전망치도 하향 조정(0.9%→0.4%)

■ 국제에너지기구(IEA), 내년 글로벌 원유시장은 일일 100만배럴 공급과잉에 직면

- 내년 글로벌 원유시장에서는 중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일일 100만배럴의 공급과잉 상황이 나타날 전망. 또한 OPEC+의 감산이 중단되면 공급과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 전기차 사용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도 해당 추세에 일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소매판매 및 수출입.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발언
- 중국 10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일본 3/4분기 GDP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친트럼프계 중심 내각 구성은 가속화

- **트럼프 인수위,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논의. 이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연장을 위한 자원 마련의 일환이며, 화석연료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회귀 가능성을 의미. 세액공제 폐지 현실화 시 전기차 판매 감소할 전망
 - Tesla 측은 보조금 폐지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GM·Ford 등 경쟁사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
- **트럼프, 주요 각료 인선** : 톨시 개버드를 국가정보국장에, 극우 성향의 맷 게이츠를 법무장관에 지명. 개버드 지명자는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출신으로 최근 공화당으로 당적 변경. 게이츠 지명자는 양당의 반대로 상원 인준 통과가 불투명
 - 반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이어, 제이미 다이먼 JPMorgan CEO를 차기 내각에서 배제한다고 발표
- **이스라엘, 트럼프의 對이란 강경책 전망에 긍정적 평가** : 코헨 에너지 장관은 트럼프가 이란 핵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화협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對이란 강경파 인사들의 기용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
- **러시아, 트럼프 주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수용 의사 표명** : 가틸로프 UN 대사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치적 해결을 제안한다면 환영한다고 발언. 다만 '24시간 이내 러-우 전쟁 해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해외시각] 트럼프 정책은 미국 및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

- **트럼프 관세,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로 연결** : 관세 인상이 소비자 부담 가중과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65%에서 75%로 상승(BCA Research)
- **트럼프 정책, 인플레이션 재상승 초래할 우려** : 감세와 이민 규제가 노동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4.5%로 높아질 전망(CNBC)
- **트럼프 정책 본격 시행되면 여타 주요국 타격 불가피** : 재정, 세금, 이민부문에서 트럼프 정책이 본격화되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달러화 강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축소 등에 직면. 특히 중국과 멕시코 등에 큰 타격 예상(HSBC)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 행정부, 규칙 기반의 세계무역 체제 무력화시킬 소지 - Financial Times

(A crumbling system of trade rules awaits Trump's wrecking ball)

- 최근 수년간 규칙 기반의 세계무역 체제는 퇴조. 이는 미국이 주도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구속력 약화를 의미. 트럼프 신정부에 로버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가 다시 입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WTO 분쟁해결 능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
- 한편 바이든 정부와 비교하여 트럼프 신정부에서는 동맹국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도 가능할 전망. 아울러 WTO를 파괴하기 보다는, 방치와 무관심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 이는 결과적으로 WTO 중심 다자주의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

■ 중국의 對美 무역전쟁 대응, 보복·회유·수용 등 다각적 접근 예상 - Financial Times

(China arms itself for potential trade war with Donald Trump)

- 트럼프 재집권과 중국 강경파 인사 임명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심화될 소지. 하지만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여타 국가 조치에 대응),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중국판 블랙리스트), 수출통제법(자원 무기화) 등을 통한 보복 조치는 다수의 예상과 달리 미국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Control Risks)
- 한편 양국 간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제조업 직접투자 확대,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등 미국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 또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광범위한 보호주의 조치는 다른 주요국과 미국 간 신뢰 훼손을 초래하여 오히려 중국의 무역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 약세, 연준과 ECB의 정책기조 차이로 심화될 전망 - W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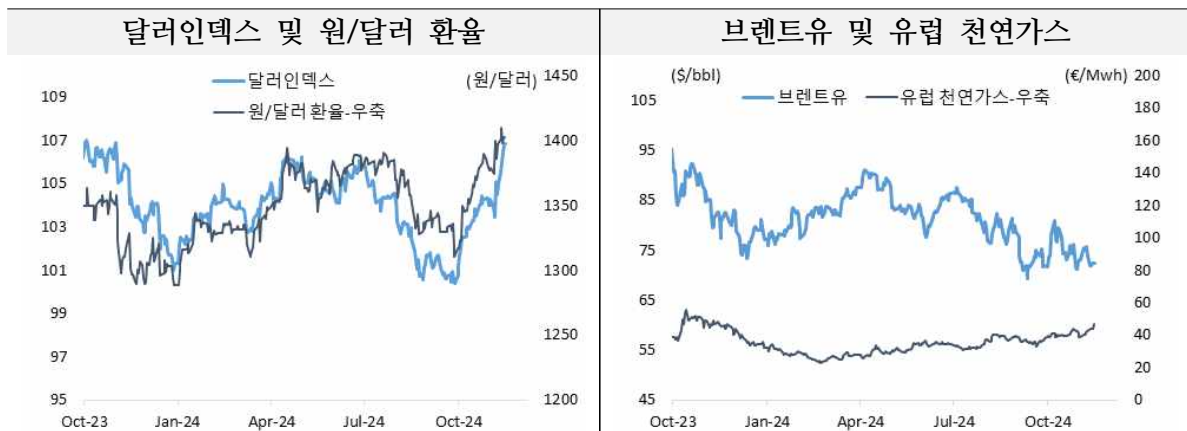
(Euro Likely to Fall Further on ECB-Fed Divergence)

- 미국은 트럼프가 제시한 친성장 정책과 관세 조치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전망이 우세. 일부 연준 위원들도 내년 금리인하 경로 관련 신중한 입장으로 선화. 이에 달러화는 상당 기간 강세 기조 이어질 것으로 관측
- 반면, 미국의 관세 위협 등으로 고조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ECB는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ING). 이에 더해 지정학적 위험과 역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ECB의 공격적 금리인하가 예상.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유로화 가치와 달러화 가치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소지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